

광주경자구역청 설립 속도...내년 1월 개청 정원 45명 승인...광주이노비즈니스센터 등지

민선 7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구역지정에 이은 첫 단추인 전담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안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광주경자구역청의 기구와 정원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시로 통보해왔다.

인력은 청장 1명(1~2급 상당)과 본부장 1명(3급 상당)을 비롯해 투자유치 전문가 등 모두 45명 규모로 꾸려진다. 매년 투자유치 실적 등 성과를 면밀히 진단해서 조직 규모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며 첨단3지구 광주이노비즈니스센터에 내년 1월 등지를 틀 예정이다.

투자유치를 비롯해 혁신성장 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혁신생태

계 구축, 규제 특례 활성화를 포함한 신산업 투자지원 등이 주된 업무다.

시는 연말까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 국가산단),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 (도시 첨단 국가 산단), 인공지능 융복합지구(첨단3지구) 등 4개 지구, 4.371km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기구·인력 승인은 4개 지구와 인접 혁신기관을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기 기자



철거된 백운고가차도 사이로 질주하는 차량들

31년만에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가 23일 오전 마지막 상판이 해체돼 도로를 지탱했던 기둥만 남아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5대강 중 섬진강만 환경청 없다

홍수피해 반복...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섬진강 유역 제방과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섬진강을 전담 관리하는 환경청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전남 지역국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건의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댐 수위가 높아져 방류를 하면서 하류의 제방과 하천 곳곳이 무너지고 범람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섬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수차례 반복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이 항구적인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섬진강(212km)은 한강(482km), 낙동강(506km), 금강(395km), 영산강(129km) 등 국가 5대 강 중 하나로 수계가 네 번째로 길지만 유일하게 전담 관리하는 환경청이 없다. 현재 섬진강 관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진강 유역의 홍수 통제, 하류 열해피해 조절, 용수배분 등 환경분쟁 해결과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섬진강 유역을 둔 광역단체는 전북, 전남, 경남 등 3곳이고, 지자체는 남원,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 화순, 보성, 곡성, 구례, 장흥, 순천, 광양, 하동, 남해 등 15개 시·군이 다.

지난 8월 홍수피해 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남 기자

세계인권도시포럼 온라인으로 2면

정은경 타임지 올해100인 선정 3면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지원 4면

광주 생활SOC 5곳 선정...국비 79억 확보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방림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숙원사업 해결...부대 효과 기대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광주에서 5곳이 선정돼 국비 79억원을 지원받는 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로, 문화·체육·보육·복지시

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지원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건립비도 줄이는 등 부대 효과가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은 ▲동명동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동구) ▲송당경로당

건립(서구) ▲방림생활문화센터 건립(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건립(남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북구) 등이다.

동구 동명동 행정복지복합센터는 동명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 주차장, 주민건강센터 등이, 서구 송당경로당은 유촌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경로당,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남구 방림생활문화센터는 방림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직골생

활문화센터는 사동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해 생활문화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을 만든다.

북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우산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다함께 돌봄센터가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5개 사업이 선정돼 시민 생활밀착형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동주 기자

한전공대 명칭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가닥 상표권 등록...교육부 대학설립 인가 단계서 최종 확정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과대학의 공식 명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잠정 결정됐다. 23일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회 등

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현재 잠정 확정된 교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마쳤다.

앞서 한전은 올해 초부터 내부 평가와 외부 국민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집단 컨설팅과 브랜드 네이밍 과정을 거쳐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사실상 잠정 확정했다.

교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업 명칭인 '한전' 대신 국가명 '한국'을

넣고 정체성을 감인해 '에너지'를 넣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설립추진위는 오는 10월 5일 열리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교명 잠정 확정안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잠정 확정된 교명은 교육부 대학설립 인가 단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수남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